

한국의 미디어법 개정

우라베 노리호(浦部法穂), 호우각칸(法学館)헌법연구소 고문
2009년 8월 10일

언론의 자유를 둘러싸고 한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7월 22일, 한국의 여당 한나라당은 야당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난투극 속에서 “미디어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통과시켰다. 한국의 국회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하는데, 국회의장석에서 야당의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없었을 의원이나 결석의원의 자리에서 여당 의원이 “대신하여” 투표를 한 “대리투표”와 총 투표수가 정족수에 모자라 “부결”된 법안을 재투표로 가결시키는 등의 국회법 위반 사실도 지적되어 헌법재판소가 의결의 유효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문제의 “미디어법 개정안”은 “신문법”, “방송법”,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3 법안의 개정안으로 그 최대 핵심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업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 아래에서 “방송의 공영화”란 명목으로 방송국 통합이 이루어져, KBS와 MBC 두 방송국으로 통합된 것과 함께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이 금지되었다. 그 뒤, 1991년에 공중파 방송국으로는 유일하게 민영방송으로 SBS가 개국하였으나, 신문·대기업의 진입금지는 유지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군사정권 아래에서의 통제의 잔재를 없애고, 시장자유화를 통해 공중파 방송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시장의 독점을 없애고 경쟁력 있는 미디어 기업을 만들어내 콘텐츠를 다양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신문·방송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이러한 군사정권의 통제의 잔재를 없애는 것을 통해 새로운 채널이 등장하여 시청자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진정한 방송민주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개정 찬성파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방송,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언론악법”이라며 맹렬하게 반발하여 방송국의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까지 참가한 파업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3대신문은 이명박 정권과 가까우며, 이에 비해 모든 방송은 현정권에 비판적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디어법 개정은 정권과 가까운 3대신문사와 대재벌에 의한 방송지배를 노린 것이며, 정권에 대한 방송의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작년 5월~6월에 걸쳐 한국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에 항의하는 “촛불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 이명박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었는데, 이 시위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이 광우병을 다룬 MBC의 보도프로그램 “PD수첩”이었다. 또한, 올해 5월의 노무현 대통령 자살을 둘러싸고도 텔레비전은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한국 검찰은 올해 6월, 앞서 말한 “PD수첩”에 대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날조·왜곡이 있었다며 제작진을 명예훼손·업무방해 용의로 기소하였다. 또한, 7월에는 미디어법 개정 반대하여 파업을 주도한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체포되는 등, 이명박 정권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하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루어진 “미디어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는 그대로 언론 자유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매스미디어의 독과점체제는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의 자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사람들이 다종·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의견과 정보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우리들은 문제를 다면적으로 볼 수 있으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어떤 하나의 의견과 시각 혹은 일면적인 정보밖에 주어지지 않는 경우, 사람들의 판단도 일면적이 되며, 그런 사회는 언젠가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진정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의견·정보의 다양성 확보는 최대한 추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견·정보의 “정보 제공자”로서의 매스미디어의 힘은 거대하다. 인터넷이 보급되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신문과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도저히 따를 수 없다. 그러한 “정보 제공자”로서의 매스미디어의 독점화·집중화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의견이나 정보의 편향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업금지, 한국에서는 군사정권 아래의 통제의 잔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정보의 다양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하나의 가능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업이 허용되고 있다. 방송면허의 기준에 “3 사업 지배금지”(동일 지역에서 신문·텔레비전·라디오의 3 사업을 지배하게 될 경우에는 방송면허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신문과 텔레비전 두 사업만이라면 금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규정 자체도 대도시권에서는 그 적용이 제외된다. 그 결과, 일본의 신문과 민영방송 텔레비전(특히 이른바 키스테이션 key station - 니혼 TV, TV 아사히, TBS, TV 도쿄, 후지 TV)은 완전히 계열화되어, 신문과 텔레비전 사이에 보도기관으로서의 경쟁관계는 없다. 게다가 어떤 신문과 텔레비전도 뉘앙스의 차이 정도는 있을지라도 보도내용은 모두 비슷비슷하며, 텔레비전에서는 보도프로그램마저 오락화되어 연예인이 일방적인 의견을 말하게 하는 류의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의견·정보의 다양성은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다 해도 좋다. 그 결과 사람들은 미디어가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 일제히 얼굴을 향하여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붕괴시킬지도 모르는 위험한 징후이다. 한국에서는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싸고 언론 자유의 의의와 매스미디어 본연의 자세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아니 일본에서야말로 더욱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